漢拏曰那 제9199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0년 9월 11일 금요일**(음력 7월 24일)

# 4·3특별법 개정 국회 논의 본격

행안부, "역사적 중요성·유족들 고령 종합 고려해야" 개별법에 의한 배·보상 우선 추진이 재정 부담 완화 군사재판 무효화엔 '난색'… "재심제도로 구제 가능"

정부가 제주4·3 희생자 배·보상을 제주4·3특별법에 의해 추진하게 되 면 과거사법 제정을 통한 포괄적 입 법 방식에 비해 재정적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4·3의 역사적 중요성과 유족들의 고령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가 4·3 특별법 개정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오영훈 의원(더불어민 주당·제주시을) 등이 발의한 제주4· 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소관 부처의 4·3특별 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도 공개 됐다. 앞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은 행 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집중 논 의될 예정인데, 논의과정에서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행안위 수석전문위원 실에서 내놓은 정부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심의를 이어가게 된다.

검토의견에 따르면, 오 의원이 제 주4·3특별법 개정안에서 희생자 배· 보상 조항을 둔 것에 대해 행정안전

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도 과거사 사건 전반에 대한 통일적 원칙과 기준을 정한 '과거사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시행해 일 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우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개별법에 의한 배·보 상 우선 추진 여부는 우리 현대사에 서 제주4·3사건이 차지하는 역사적 중요성, 희생의 규모, 대부분의 희생 자 및 유족이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제주4·3사건은 이미 관련 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이 이뤄졌으나 관련 입법의 부재로 배・ 보상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므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도 설명했다.

행안부는 특히 개별 입법을 통한 배·보상 추진의 장점으로 ▷4·3사건, 여순사건 등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배·보상 수요가 높은 개별사건별 입

법방식을 통해 재정적 부담 완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포괄 입법방식에 비 해 법 제정 및 시행상 소요기간 단축 ▷사건별 특성 반영이 용이하고 ▷ 피해자 및 유족 요구에 부합하다고 평가했다.

행안부는 다만, "개정안과 같이 제 주4·3사건의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는 결국 국가의 상당한 재정부담 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 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에 판단을 맡겼다.

행안부는 4·3특별법 개정안의 또 하나의 쟁점인 군사재판 무효화 조 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 혔다. 행안부는 "재심 제도가 존재하 는 상황에서 재판 절차에 의하지 않 고 개별 법률로 재판의 효력을 무효 로 확인하는 것이 타당한지 추가적 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법부 권한 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4·3수 형자 재심판결과 같이 재심제도를 통해 구제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기존의 '형사소송법'상 재심으로써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10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의 첫 상설정책협의회가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의장 및 도청 실국장, 도의회 특위위 원장,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 "내년도 예산 도민중심 적극재정 편성"

#### 제주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제주형 뉴딜T/F 구성 포함 5개항 합의… "적극 협력"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는 내 년 예산 편성 방향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재정 운용에 초점을 두 기로 약속했다. 특히 제주도와 도의 회가 첫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내 년도 예산편성 방향 등을 협력키로 하면서 향후 도와 의회 사이 '정책 협치'가 탄력 가동될지 주목된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1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개 최하고 2021년 예산 편성 방향, 포스 트코로나 대응 방안 등 5개 사항을

합의했다.

이날 도와 의회는 2021년 예산 편 성 방향과 관련 도민이 체감할 수 있 도록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 는 적극재정을 통해 1차 산업, 소상 공인, 자영업자, 관광·문화 및 서비 스 등 제주산업 보호에 힘쓰기로 했 다. 또 세수여건을 고려한 도민 체감 형·도민 중심의 예산 편성, 일자리 중심의 제주경제 회복과 신성장 동 력 창출, 2021년 추경재원 불투명에 따른 법정·경직성경비 최대한 반영, 비목별 세출조정 등 긴급성・필요성・ 연내집행 가능사업에 대한 합의를

이와함께 포스트코로나 대응 방 역·경제 회생방안에 대한 합의도 이

뤄졌다. 양 기관은 포스트코로나 대 응 방역·경제 회생방안과 관련 코로 나19 장기화에 따른 철저한 방역 대 응체계를 갖춰 지역사회 감염을 차 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요자 부담금리 인하 추진 등 도민생활 안 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포스트코로 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더불어 국가프로젝트인 한국판 뉴 딜 종합계획의 참여 및 강력한 추진 력 확보를 위해 '제주형 뉴딜T/F'를 공동 구성하고 도민의견 수렴과 국 비예산 확보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 다. 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다. 이태윤기자

### 잇단 태풍에도 농작물 재해보험 뒷전

가입률 41.8% 그쳐 보상 취약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잇단 기상악화 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지만 필수조건인 도내 농가 에서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여 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 난 8월말 기준, 올해 제주지역 농작 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41.8%다. 이 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농작물 재해 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8%에 견 보험금 가입을 통해 사상 최대치인 줘 12.0%p 상승하며 농가에서의 인 식 개선에 따른 참여도는 좋아졌다.

가입률은 2016년 4.8%, 2017년 12.2 %, 2018년 22.4%, 2019년 38.6% 등 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하지만 올해 의 경우도 도내 농가 10곳 가운데 6 곳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 으면서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피 해 보상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

지난해 도내 농가들이 잇단 태풍 640억원을 지원받았다. 감귤을 비롯 한 월동무, 당근, 가을감자 등 농작 최근 4년간 도내 농작물 재해보험 물 재해보험을 통해 1만2331농가에

612억원이 지급됐다. 시설 및 작목별 로는 원예시설(시설하우스) 148억 원, 가을감자 98억원, 월동무 70억 원, 콩 58억원, 양배추 30억원, 브로 콜리 26억원, 당근 22억원, 메밀 6억 원 등이다.

올해도 초반 저온현상과 함께 최근 8호 '바비', 9호 '마이삭', 10호 '하 이선'등 태풍 3개가 차례로 내습 농 작물 및 시설에 큰 피해를 입혔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에 따른 농 (7회)과 가을장마 등의 재해로 막대 가 보험료 부담률은 15%다. 나머지 보험료는 국비 50%와 도비 35%에서 지원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도내 공공시설 10월 5일까지 운영 중지

제12차 생활방역위원회… 오는 14일까지에서 연장

제주도내 공공시설의 일시적 운영 중지가 내달 5일까지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제12차 제 주형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개최하 고 도내 공공시설 운영을 10월 5일 까지 중지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 다. 당초는 오는 14일이 공공시설 일 시 운영 중지 종료 예정일이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운영을 중지키로 결정했다. 확산세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 만, 전국 일일 확진자가 100명 이상 상황을 고려했다.

는 20일까지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 시스템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리두기 2단계 조치의 일환으로 다중

이용 공공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 조 치를 요구하고 있고, 오는 30일부터 추석연휴를 맞아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달 5일까지

특히 제주지역에서 수도권 방문과 도내 온천·게스트하우스 방문 확진 발생하는 등 집단 감염이 지속되는 자의 접촉에 의한 확진자도 지속적 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량 환자 발생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 시 타시·도 이송이 불가해 자체 의료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